



95 건설시공 다짐대회

건설공사관련

부조리 방지 및 불법하도급 근절

지난 1월 17일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대한설비공사협회(회장 이동락)를 비롯하여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7개 단체는 95 건설시공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날 건설교통부(장관 오명)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건설공사를 둘러싼 만연된 뇌물수수 관행을 부실시공 방지 차원에서 뿌리 뽑기로 하고 금품을 받은 공사감독관과

감리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물론 금품을 제공한 업체의 직원과 대표자도 형사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 이동락 회장은 「우리 업계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기능인력에 대하여 계도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설비분야 건설시공의 질을 향상키 위해서 각종의 세미나와 교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설교통부, 부실방지 종합대책

다음은 이날 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실 김건호 실장이 발표한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부실공사의 원인]

1) 제도 및 관행

선진국은 기술·시공능력·신뢰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반면에 국내는 가격위주의 입찰제도로 인한 덤핑입찰이 선행되고 있으며, 덤핑입찰의 결손 요인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

일괄하도급·재하도급·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등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하도급이 만연된 가운데 원도급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

또한 설계품질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 책임감리제도의 미정착, 전문건설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표준건축비·노임단가·공사비산정기준(폼셈)등의 비현실성으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초래되고 있다.

2) 책임의식

설계와 시방을 엄격히 따르지 않는 적당주의와 기능인력의 직업윤리의식 결여등 건설



건설교통부(장관 오명)는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저가입찰공사 및 잦은 설계변경공사 등의 현장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 집중감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업체·건설기술자의 공사부실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부족하다.

부실시공업체와 해당 기술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는 등 관련법령적용 등에 있어 엄격하지 못하다.

[지난해의 추진실적]

1) 제도개선

정부는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에 따라 그동안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예산회계법 등 건설관련법령을 대폭 개선하였다.

① 입찰제도 개선 : 100억 이상 교량 터널 등 14개 주요 공종에 대하여 종래 가격위주의 입찰제 대신에 시공실적과 기술능력 위주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를 도입했으며,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과당경쟁과 덤핑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70%이하 낙찰공사는 85%까지 차액을 현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85%미만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2배로 강화하고 감리자를 증원 배치하는 등 공사감리를 대폭 강화했다.

② 감리제도 개선 : 감리회사 육성을 위하여 4개 정부투자기관에 감리회사를 설립하도록 했으며, 감리대가를 현실화(2~3배)시키고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 및 책임을 강화 시키는 등 종전 감독체계를 책임감리로 전환시켰다.

③ 부실시공업체의 책임강화 : 하자보수기간을 3~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시키고,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는 물론 대표자와 기술자는 5년 이하의 징역등 제재처분이 강화되었다.

④ 하도급대금 직불제 도입 : 원도급자가 입찰시 미리 하도급할 사항을 기재한 입찰내역서를 제출토록 하는 부대입찰제와 예정가격의 85% 미만의 저가입찰공사 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를 시행, 일괄하도급시 면허취소를 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2) 철저한 현장점검 실시

지난해에는 부실공사를 반드시 척결한다는 굳은 각오로 연초부터 전국 주요 공사현장에 대한 불시 특별점검을 통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① 부실관련업체와 감리자 등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14건, 과징금 3건, 고발 14건, 주의 등 1천2백93건을 조치하는 등 18회 걸쳐 전국 1천5백46개 현장을 점검하여 2천9백19건의 부실사례를 적발하고 이중 부실이 심한 90건은 재시공하도록 조치했다.

② 건설업체 2백90개사, 감리업체 45개사, 건축사 사무소 7개사, 관련기술자 9백64명, 감독 정계 6명 등 부실공사관련 건설업체 등에 대해 면허취소 등 총 1천3백6건을 제재 조치했다.

③ 불량레미콘을 근절하기 위하여 1백63개 레미콘 공장을 불시에 점검하여 골재 입도 불량 등 품질관리가 미흡한 68개 공장을 적발하여 개선 명령 등의 시정조치했다.

3) 조사·설계, 감리, 시공 등 전과정에 내재되

어 있는 부실요인을 사전 제거할 수 있는 부실공사에방대책 수립 시행

① 설계부문: 설계도면 상세화의 의무화, 설계용역비를 사전 발견하기 위하여 시공전 감리 및 시공업체 검토 의무화, 책임감 고취를 위해 참여 기술자의 담당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했으며, 당해공사에 사용될 자재와 재료 등에 대한 품질기준 및 시공상 유의사항 등을 특별시방서에 필히 명기하도록 했다.

② 감리 및 시공부문: 감리자는 시공전 사전 설계도면 검토 및 시공업체의 시공상세도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감리자의 자질 및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 토목과 건축 등 분야별로, 고급·중급·초급반으로 구분해 행정 직무 능력교육을 강화하는 등 감리교육제도를 강화했다. 공사현장별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그 추진 실적을 매월 발주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시공전 필히 시공상세도 및 시공시 유의사항 작성을 의무화했다.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 건설시공 의식고취를 위해 성실시공 및 책임시공 안내 간판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안전사고방지와 품질확보를 위하여 선진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총체적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의 도입시행을 적극 유도했다.

4) 부실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국민불편 해소: 건설교통부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 지난해 5월부터 부실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1백31건을 접수, 90건을 처리 완료했으며 41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다. 지자체 및 발주기관에 부실전담부서를 설치, 소관공사 및 인·허가공사에 대한 현장점검계획을 수립·실시했다.

5) 건설종사자의 의식개혁: 건설관련단체 및 업체별 결의대회, 세미나 개최 표어부착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했으며 부실감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감리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와 감리자의 직무능력

배양 및 공인의식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6월에는 건설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건설인의 긍지와 장인정신을 함양시켰고, 건설진흥추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시공업체표창 및 건설인의 결의를 다짐했다. 또한 부실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장관천서를 2회에 걸쳐 2만여 업체에 발송했다.

[금년도 추진방향]

1) 설계부문

① 설계용역의 부실예방을 위한 설계감리제도의 도입: 대형 및 특수공공공사에 대해 설계감리를 실시하며 엔지니어링신고업체 및 기술사 사무소 등록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설계·시공입찰(터키) 제도의 활성화: 설계용역이전에 입찰방법심의의 의무화 하고 입찰방법심의시 대상공사를 확대 지정한다. 기술우위 설계자에 대해서는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 개정 추진)

③ 설계심의 내실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지방설계심의 위원회 활성화 및 발주기관의 자체 설계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유지관리에 관한 심의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각종 자재의 품질 및 시공사항 등을 명기한 특별시방서 작성을 유도하고, 설계성과품의 사전 준공검사제를 도입한다.

2) 감리 및 시공부문

① 책임감리제도 조기정착: 감리인력 수급 분석을 통한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등 감리원의 자격인정기준을 강화시킨다. 감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감리교육을 강화, 무경력 초급감리자에 대한 교육을 3주에서 2~3월로 강화시키고 현장 감리수습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내용을 보완한다.

② 감리대가의 단계적 현실화: 95년부터 정부노임단가를 폐지하고 한국건설감리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③ 외국감리회사의 조기 참여 허용 :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고 외국감리회사 참여 대상공사를 확대한다.

④ 감리제도의 중장기 발전계획 : 책임감리제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해외감리제도의 조사 자료 분석 및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⑤ 예비 준공검사를 의무화한다.

3) 부실관련자의 처벌 강화

① 부실감리업체 및 감리원 : 부실감리업체에 대해서 6개월 업무정지를 시키던 것을 1년 이내 업무정지로 확대하고, 감리원은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시킨다.

② 부실설계자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 부실설계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③ 품질시험 미실시업체 등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한다.

④ 경미한 제재라도 이를 자주 받으면 입찰참가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실벌점제를 도입한다.

4) 입찰제도 개선

가격위주의 입찰제도를 시공능력위주로 개선

① 입찰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 14개 공종에서 55억원 이상 18개 공종으로 확대 실시한다.

② 최적격낙찰제 : 최저가낙찰제를 유지하되 교량·터널·지하철 등 100억원 이상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기술능력위주의 최적격낙찰제를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③ 95년부터 정부노임단가를 폐지하고 건설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 공사비 현실화 및 잦은 설계변경에 의한 부실요인을 제거한다.

5)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① 교량 등 주요시설물의 안전성 : 20~30년 경과시 유지관리를 소홀히할 경우 각종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② 지난해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년부터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교량·터널·지하철 등 주요구조물과 공동주택과 대형건축물 등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철거·개축·사용제한 등 조치를 취한다. 주요 시설물은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하자책임을 해제한다. 안전진단업무의 공정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상반기중 시설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한편 하반기중 민간의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록을 실시한다.

③ 지난해 말 일체점검결과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된 교량·지하철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하여 본격적인 개보수에 착수, 보수대상 5백88개소는 8백9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중 보수를 완료하고, 개축대상 4백개소중 금년에 총 2천4백97억원을 투입하여 3백16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내년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한다.

6) 불법하도급의 근절

① 하도급계열화의 확대 : 하도급계열화업체에 대하여는 PQ시 인센티브를 부여, 금년부터 하도급계열화 대상업체를 도급한도액 1백50억원 이상에서 1백3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토록 행정지시를 했다.

② 부대입찰제의 확대 : 상하수도, 공용청사, 도매시설, 관람집회시설을 추가하는 등 100억원 이상의 14개 공종을 55억원 이상의 18개 공종으로 확대 실시한다.

7) 기능인력의 윤리의식 강화

기능인력의 윤리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 경력수첩을 발급하는 등 점차 제도권에 흡수하고, 건설기능대회나 명장제도 등의 활성화로 장인정신을 함양시키고, 공공직업훈련원을 통하여 직무교육 및 정신교육을 강화한다.

8) 불시특별점검의 지속적 실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조치 등으로 현장 점검의 내실화를 다지고, 부실관련업체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제재 조치를 한다. 현장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제재내용을 전산화하여 부실관련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9) 부실공사관련 부조리 방지

뇌물과 향응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적당히 시공하고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관행적 구습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과감한 의식개혁과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금품을 받은 공사감독관과 감리자의 형사처벌은 물론 금품을 제공한 업체의 직원 및 대표자도 형사고발한다.

공사계약 체결 또는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하여는 예산회계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하고, PQ심사시 감점하는 등 최대한 불이익 조치를 가한다.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저가입찰공사 및 잦은 설계변경공사 등의 현장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 집중감사를 실시한다.

■ 이동락 회장, 선진공법 활성화 강조

95 건설시공 다짐대회에서 이동락 회장은 건설시공을 위해서는 설계, 감리, 시공,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한 바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설비업체는 공사수주 환경개선과 기술인력의 의식개혁 그리고 시공능력 배양을 바탕으로 부실시공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 목표】

① 건설공사는 주문제작에 의하여 시공, 적정공사비 투입이 필수적이므로 공사수주에 있어서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수주를 지양하



이동락 회장은 95 건설시공 다짐대회에서 「공사수주 환경개선과 기술인력의 의식개혁 그리고 시공능력 배양을 바탕으로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고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계도하고 있다.

② 정밀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현장시공도 작성이 필요하므로 이에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개발 추진과 회원사에 보급·활용하고 있다.

③ 불량자재를 건설현장에서 추방할 수 있도록 대한설비공사협회에서는 개선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체시험소를 설립·운영하여 설비자재는 협회에서 인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

④ 회원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벌칙 강화와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주지토록하여 양질시공에 앞장서도록 계도하고 현장기능인력에 대하여도 매일 현장 단위별로 건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도록 계몽하고 있다.

[추진 실적]

① 기계설비분야의 시공상 하자발생 사례를 수년간 수집·연구하여 하자 발생에 대한 시공 대책을 책자로 발간하여 설비업계는 물론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하므로써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하자 발생시는 이에대한 처리 대책을 제시하여 주므로써 공사원가절감과 품질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② 공기조화냉동공학회,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한국냉동공조기술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와 협의회를 지난 1986년 8월에 구성해 매 분기별로 지금까지 33회에 걸쳐 공동연구와 기술교류로 시공업계, 자재업계, 하계의 협동체제 구축으로 기술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③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정부표준품셈의 신설·개정이 시급한 항목을 선정하여 닥트제작 설치 등 57개 항목에 대하여 현장실사와 관계 자료를 검토해서 정부에 건의하여 품셈의 합리화 개선을 도모하여 왔다.

④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및 건설시공 확립을 위하여 연31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부실공사추방 실천결의대회를 연8회, 표준품셈 적용기법 및 건설시공 세미나 개최 연2회, 신공법 적용을 위한 자동화 공장 및 현장 견학을 실시하므로써 기업경영혁신 및 시공능력향상을 기하도록 했다.

⑤ 정기간행물인 월간 설비공사를 매월 4천부를 발간하여 신공법 해설, 기술인력 관리, 공사현장안전관리, 부실시공방지계몽, 관계법령 해설 등의 내용을 수록·배포하여 업계에 정기적으로 홍보해오고 있다.

[평가와 반성]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설비업계는 자율적으로 회원사와 기능인력에 대하여 계도해오고 있으며 정밀시공에 필요한 현장시공도 작성을 위하여 CAD용 컴퓨터를 도입·활용하고 있고 불량자재를 막기 위한 자재 전시장 설치

와 신기술 소개 등 설비업계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공사 수주시의 과당경쟁 등으로 인하여 적정공사비 확보가 되지 않아 기업 경영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또한 업계 일부의 중소기업에서 양성한 기술인력을 타업체에서 스카우트 해가는 사례가 빈번하여 기술인력 수급 체계의 불안으로 현실적으로 건설시공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반성된다.

[95년 추진계획]

금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97년부터 본격화 될 건설업 시장개방에 따라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설비업계가 국제경쟁력 향상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세계화의 생존 전략은 미래 지향적인 일대 발상의 전환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밀시공을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현장시공도 작성을 시행하고 이를 회원사에 보급하며, 신공법을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량자재를 추방하기 위하여 협회내에 자재시험소를 개설하고 불량자재를 공인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공사원가의 절감 및 시공상의 품질향상에 기여도가 큰 입체배관 공장조립 방식인 라이저유니트공법과 기존의 배관용접공법도 채택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기능공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집합식교육도 중요하지만 설비업계의 업체내에서 현장실무 위주로 하는 교육을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적정가격 공사수주와 건설시공을 위하여 저가수주와 저가하도급 방지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기증인력의 대우개선과 작업환경 개선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설비분야 건설시공의 질을 향상키 위해 각종의 세미나와 교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